기 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사건번호 1786/2008

자유권규약위원회 106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2012. 10. 15. ~ 11. 2.)

진 정 인 : 김종남 등 (대리인 :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 이하나)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8. 1. 15. 같은 해 1. 16 및 4. 25. (최초제출일)

참 고 문 서 : 2008. 4. 29.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규정 제97호 결정(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2. 10. 25.

주 제 : 의무적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본 안 쟁 점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절 차 쟁 점 :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규 약 조 항 : 제18조 제1항

선택의정서 조항 : 제5조 제2항 (b)호

별 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 106차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1786/2008[1)]

진 정 인 김종남 등 (대리인 :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 이하나)

---

1) 본 진정 심리에 참석한 의원 명단 : Mr. Yadh Ben Achour, Mr. Lazhari Bouzid, Ms. Christine Chanet, Mr. Ahmad Amin Fathalla, Mr. Cornelis Flinterman, Mr. Yuji Iwarsawa, Mr. Walter Kàlin, Ms. Zonke Zanele Majodina, Ms. Iulia Antoanella Motoc, Mr. Gerald L. Neuman, Mr. Michael O'Flaherty,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le Rodley, Mr. Fabián Omar Salvioli, Mr. Marat Sarsembayev, Mr. Krister Thelin, Ms. Margo Waterval

Mr. Michael O' Flaherty 의원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Mr. Walter Kàlin 의원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Mr. Gerald L. Neuman과 Mr. Yuji Iwasawa 의원들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Mr. Fabián Omar Salvioli 의원의 별개(보충)의견은 이 견해에 첨부되어 있다.

피 해 자 진정인

당 사 국 대한민국

진 정 일 2008. 1. 15. 같은 해 1. 16 및 4. 25. (최초제출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2. 10. 25.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김종남 등을 대리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1786/2008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들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견해를 채택한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견해

1. 388명의 진정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다(진정인 명단은 별첨 1.참조).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동 선택의정서는 대한민국에서 1990. 4. 10. 발효되었다. 앙드레 카르보노, 이하나 변호사가 진정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실

2.1 진정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무적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 16명의 진정인들은 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4. 8. 24. 결정에서 병역법 제88조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한 양심의 자유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게 가능하면 개인이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이고, 그러므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2.2 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종국적인 결정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어떠한 항소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3 진정인들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약 600명에서 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매달 그렇게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

3. 진정인들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내에 없다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2006. 11. 3. 채택된 진정사건번호

2) 모든 진정인들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군복무를 위한 징집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진정인들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1321/2004 및 1322/2004,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이 견해에서 위원회는 현 진정사건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고,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2008. 11. 14. 답변서 제출을 통해, 당사국은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3]에서의 위원회의 견해를 언급하며 위원회가 당사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중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종전 결정에서의 위원회의 의견에 관하여, 당사국은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인 독일과 대만의 법제도가 당사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또한 대만은 전쟁 중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으며, 1950년부터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1953년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남한에서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그 가족과 헤어졌다. 당사국은 휴전협정이 당사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휴전협정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전(終戰)선언이나 불가침 및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법체계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있다. 당사국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과 155마일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다.

4.2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국가적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은 대체복무제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4.3 당사국에 따르면, 군대에서 종종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학업이나 직업상 경력의 중단과 같은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고의로 징집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따라서 충분한 지상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 당사국은 만약 국민적 합의 없이 병역에 대한 예외 주장을 수용한다면, 병역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문으로 이어져 병역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약화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병력 확보가 방해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당사국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병력의 공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상호간 및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예외 인정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4.4 "국가적 측면에서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그 자체로 사회 내에서 응집되고 안정된 다원주의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독특한 안보 상황이

3) 전기 참조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공정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의견이다.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제도의 이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다. 오직 이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2005. 7.과 2006. 9.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 인정에 대하여 각각 72.3%와 60.5%가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4.5 당사국은 의무적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 군인 중 대다수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참여한다. 그들은 국가를 방어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실제로 2002. 6.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 간 충돌에서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4.6 당사국은 1990. 4. 10.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가입 시에,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범위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1993. 7. 30. 그 일반논평 제22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이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위원회의 입장을 공표했다. 당사국은 당사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해석할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음을 지적한다.

4.7 당사국은 2006. 4.부터 2007. 4.까지 “민·관 합동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장래 병력 수급에 관한 전망, 병역거부자의 진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외국의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병역법 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4)]

4.8 또한 2007. 9.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복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여론에 대한 연구 결과와 관련 부처·기관의 입장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 “당사국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여기서 제시된 논거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재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진정인들의 주장

5.1 2009년 2월 23일자 의견에서, 진정인들은 그들의 주장이 위원회가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윤여범·최명진의 진정사건 1321-1322/2004[5)]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기재하였다.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5.2 국가안보 유지의 필요성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영국과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채택하였다

4) 당사국은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5) 윤여범, 최명진 對 대한민국, 진정번호 1321/2004, 1322/2004, 2006. 11. 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법들이 위 국가들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은 1948년 이래로 대한민국이 지난 50년에 걸쳐 경험한 것들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낳은 군사적 대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3 나아가 진정인들은 현재 당사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년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인원의 2%에 해당하며 이 수가 당사국의 국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감옥에 수감되므로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개선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점에 진정인들은 주목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로부터의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당사국의 우려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어떤 국가에서도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로부터의 요청이 실제로 증가하였다는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5.4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필요성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기본적 자유는 투표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1943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답변하였다.[6] 진정인들은 여론이 규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국의 헌법 또한 규약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당해 사안에서 당사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한다. 따라서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내법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당사국의 법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진정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 민간 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한 2007년 9월 18일에, 국방부는 50.2%가 대체복무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였다. 진정인들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두 개의 다른 여론조사를 인용한다.

5.5 당사국이 동 규약에 가입하였을 당시에는 아직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적용범위를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로 확장시킨 일반논평 22호를 공표하지 않았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그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의 회원국이 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및 2004년에 아무런 반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5.6 2012년 1월 16일 진정인들은 위원회에 2011년 8월 30일의 두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음을 알려왔다.

> '...그러나 제18조를 포함한 자유권규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해석은(...) 단지 규약 당사국에 대한 권고적 의미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유권규약이 필연적으로 양심적

6) 미국 연방대법원,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et al. v. Barnette et al, 319 U.S. 624,639(1943)

병역거부권 인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효력을 미치지도 않는다.'[7]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 절차

심리적격 심사

6.1 진정에 포함된 청구를 심리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a)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6.3 위원회는 2.1항에서 언급된 16명의 진정인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진정인들이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4년 7월 15일 한국의 대법원과 가장 최근의 2011년 8월 30일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군대에 복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결정하였고,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종국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진정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해 당사국이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본 사건 심의를 방해받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6.4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심리적격에 관한 그들의 주장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간주하고,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진정이 심리적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7.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본 진정을 심의하였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의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로 인해 진정인들이 기소되어 구금되었으므로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동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당사국이 이전 진정사건들[8]에서 제시한 답변, 특히 국가안보,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 사이에 형평성,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점에 관한 주장들을 되풀이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견해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리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견해[9]를 변경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7.3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자유들의 기본적 특성은 규약 제4항 제2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서 조차 훼손될 수 없다는 일반논평 제22호를 상기한다. 비록 규약

---

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24, 2010헌가16, 2009헌가7, 2010헌가37, 2008헌바103, 2009헌바3 문단 3.3.2.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허가12, 2009헌바103(병합) 문단 3.4.2.1.

8)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2006. 11. 3. 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정의민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 번호 1593-1603/2007, 2010. 4. 30. 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9) 상기 참조

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는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권리가 제18조에서 도출된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재확인한다.[10] 위원회는 나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견지한 신념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점에 주목한다. 대체적 민간 복무의 가능성이 배제된 의무복무제도는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거나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양심상 신념을 공표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 놓여지게 됨을 의미한다.

7.4 그러므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권에 내재되어 있음을 반복하여 밝힌다. 만약 의무적 군 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강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원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 영역 밖의,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하여야 한다.[11]

7.5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들이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그 종교를 신봉한다는 데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정인들에 대한 이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자행되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거부에 대한 제재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다.[12]

8. 자유권규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시된 사실들이, 각 진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그 범죄기록(criminal records)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포함된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과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권규약 상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

10) 예컨대, 진정사건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100인 대(對) 대한민국, 2011. 3. 24. 채택된 견해 참조

11) 예컨대, 진정사건 번호 1853/2008, 1854/2008, Cenk Atasoy, Arde Sarkut v. Turkey, 2012. 3. 29. 채택된 견해, 문단 10.4. 참조

12) 예컨대, 진정사건 번호 1642-1741/2007, 정 기타 대(對) 대한민국, 2011. 3. 24. 채택된 견해 참조

부록 1

1. Jong-nam Kin	김종남	195. Dae-ho Shin	신대호
2. Hyun-suk Kang	강현석	196. Jae-gul Yoon	윤재걸
3. Ue-dong Jeong	정의동	197. Hyo-jae Choi	최효재
4. Hyun-ju Shin	신현주	198. Tae-ho Eom	엄태호
5. Jun-tae Park	박준태	199. Tae-hyun Hwang	황태현
6. Seung-tae Kim	김승태	200. Sung-yong Kim	김성영
7. Joon-ho Seok	석준호	201. Jae-min Seol	설재민
8. Hee-won Choi	최희원	202. Sang-yeon Won	원상연
9. Yang-ho Jung	정양호	203. Chung-won Jeong	정충원
10. Jung-hoon Kwon	권정훈	204. Don-bum Joh	조돈범
11. Su-min Park	박수민	205. Chang-hwan Kim	김창환
12. Jun-won Seok	석진원	206. Su-won Lee	이수원
13. Seul-gi Hong	홍슬기	207. Young-bin Oh	오영빈
14. Bong-june Kim	김봉준	208. Jin-bum Park	박진범
15. Hyung-chan Kim	김형찬	209. Dong-hwan Kim	김동환
16. Hyun-je Kim	김현제	210. Sol Kim	김 솔
17. Yeo-ma-ye Na	나여마예	211. Byeong-joo Ko	고병주
18. Jae-il Hong	홍재일	212. Jung-ho Lee	이정호
19. Hyung-won Kang	강형원	213. Byung-hyun Oh	오병현
20. Kyung-hee Jo	조경희	214. Sung-ryong Oh	오성룡
21. Da-woon Jung	정다운	215. Ki-soo Song	송기수
22. Tae-song Kim	김태성	216. Sung-hyun Yoon	운성현
23. Kyu-dong Park	박규동	217. Sung-wan Go	고성완
24. Geon-uk Kim	김건욱	218. Se-hee Han	한세희
25. Sul-gi Kwon	권슬기	219. Joon-tae Hwang	황준태
26. Gyeong-su Park	박경수	220. Deuk-soo Kim	김득수
27. Chan-ho Eom	엄찬호	221. Hyo-sung Kim	김효성
28. Bit Han	한 빛	222. Jae-won Kim	김재원
29. Soon-hyun Hwang	황순현	223. Pil-young Kim	김필용
30. Jae-ha Lee	이재하	224. Tae-won Kim	김태원
31. Hyung-ju Kang	강형주	225. Sung-hun Ko	고성훈
32. Jun-seok Oh	오준석	226. Jeong-tae Lee	이정태
33. Jung-hyun Seo	서정현	227. Su-hyeon Park	박수현

34. Jae-chul Chung	정재철	228. Hye-gang Seo	서혜강
35. Sung-il Jang	장성일	229. Sung-yub Jung	정성엽
36. Ki-yong Kim	김기용	230. Dae-hyun Kang	강대현
37. Dong-il Song	송동일	231. Ja-won Kim	김자원
38. Hyun-sung Ha	하현성	232. Jung-woo Kim	김정우
39. Sung-min Chung	정성민	233. Kyung-min Kim	김경민
40. Min-jae Kim	김민재	234. Hae-joon Kwon	권해준
41. Byong-oh Ko	고병오	235. Sang-suk Lee	이상석
42. Sun-il Kwon	권선일	236. Ji-yun Park	박지윤
43. Young-nam Choi	최영남	237. Young-jae Park	박영재
44. Ji-won Min	민지원	238. Young-wook Park	박영욱
45. Yeo-reum Yoon	윤여름	239. Dong-in Seon	선동민
46. In-hee Kim	김인희	240. Ji-min Ham	함지민
47. Jeong-hun Ko	고정훈	241. Yoon-suk Kim	김윤석
48. Tae-ik Kwan	권태익	242. Kwang-eun Lee	이광은
49. Jin-woong Kim	김진웅	243. Hee-min Park	박희민
50. Ki-bok Sung	성기복	244. Neong-kul Park	박넝쿨
51. Sang-il Ma[13]	마상길	245. Seong-il Park	박승일
52. Kyong-nam Choi	최경남	246. Sung-yoon Park	박성윤
53. Seul-gi Lee	이슬기	247. Jun-sub Shim	심준섭
54. Jin-taek Choi	최진택	248. O-nam Song	성오남
55. Yun-taek Hong	홍윤택	249. Hyun-woo Choi	최현우
56. Eun-sang Lee	이은상	250. Il-jung Jo	조일정
57. Young-il Jang	장영일	251. Jeong-duk Kim	김정덕
58. Chang-yang Jung	정찬양	252. Seung-woo You	유승우
59. Jin-geun Kim	김진근	253. Tae-jong Yu	유태종
60. Seon-kyum Kim	김선겸	254. Hyun Baek	백 현
61. Min-kyu Park	박민규	255. Cheong-won Bang	방청원
62. Do-in Jun	전도인	256. Sung-kook Jo	조성국
63. Kyu-myung Jung	정규명	257. Hong-won Kim	김홍원
64. Min-spp Kang	강민수	258. Sang-goo Lee	이상구

13) 마상길, 최경남, 이슬기, 최진택, 홍윤택, 이은상, 장영일, 지원일, 김광현, 최승호, 정형모, 김지웅, 정용헌, 이강희, 이지원, 박병관은 하급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상소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65. Yeong-chang Yu	유영창	259. Sung-won Lee	이성원
66. Sung-hyun Son	손성현	260. Mun-gye Min	민문규
67. Suk-dong Kim	김석동	261. Han-gyol Soun	손한결
68. Doc-ho Her	허덕호	262. Jun Yu	여 준
69. Yang-hyun Ko	고양현	263. Kyeong-tae Kang	강경태
70. Jung-woo Hong	홍정우	264. Han-gil Lee	이한길
71. Kyoung-soeb Lee	이경섭	265. Kyoung-jun Lee	이경준
72. Min-kyu Lee	이민규	266. Heung-soo Reu	유흥수
73. Jun-cheol Yoon	윤준철	267. Gyo-sik Bae	배교식
74. Jong-min Jang	장종민	268. Seung-sik Bae	배승식
75. In-goon Kim	김인군	269. She-Young Kim	김세영
76. Myeong-seob Kim	김명섭	270. Seung-gwan Back	박승만
77. Sung-ho Kim	김성호	271. Ki-hoon Choi	최기훈
78. Yong Kim	김 용	272. Chang-hoon Jeon	전창훈
79. Young-joon Kwon	권영준	273. Seung-hwan Kim	김승환
80. Hee-sung Lee	이희성	274. Dong-yoon Lee	이동윤
81. Joo-min Park	박주민	275. Sung-min Park	박성민
82. Jung-joo Park	박정주	276. Jun-ho Son	손준호
83. Hyun-dong Yang	양현동	277. Seong-ki Jung	정승기
84. See-won Kim	김세운	278. Yong-hwa Kim	김용화
85. Oh-hyun Kwon	권오현	279. Gang-geon Lee	이강건
86. Jue-hune Park	박주훈	280. Jung-geun Yoo	유정근
87. Deok-min Ahn	안덕민	281. In-jae Han	한인재
88. Chung-jeol Lee	이중철	282. Ha-rim Min	민하림
89. Ho-young Lee	이호영	283. Chan-hyuk Joun	전찬혁
90. Jun-young Lee	이준영	284. Seok-min Lee	이석민
91. Chul-seung Yang	양철승	285. Joon-Young Ahn	안준영
92. Jin-hwang Kim	김진황	286. Young-jae Kim	김영재
93. Hyun-woo Lee	이현우	287. Sun-pil Hwang	황선필
94. Ki-taek Lee	이기택	288. Doo-sup Kim	김두섭
95. Hak-in Oh	오학인	289. Hyun-sub Kim	김현섭
96. Barl-keun Lee	이밝은	290. Jae-jun Kim	김재준
97. Ju-hak Lee	이주학	291. Seung-hyun Jung	정승현
98. Song-taek Jeong	정송택	292. Chung-yeol Choi	최충열
99. Ji-won Park	박지원	293. Jae.hee Kim	김재희

100. Sung-hyun Choi	최성현	294. Dong-hwan Ko	고동환
101. Sa-em Park	박샘	295. David Shin	신다윗
102. Jin-gon Kim	김진곤	296. Sang-hyun You	유상현
103. Kwang-nam Kim	김광남	297. Dong-geun Kim	김동근
104. Tae-hoon Uhm	엄태훈	298. Cheon-ha-tongil Jeon	전천하통일
105. Young-hoon Jang	장영훈	299. Seung-jin Jeon	전승진
106. Woo-jin Jung	정우진	300. Hyun-il Jin	진현일
107. Myung-jin Kim	김명진	301. Chong-jul Kim	김충절
108. Sung-gyu Kim	김성규	302. Myoung-chul Lee	이명철
109. Jun-hyung Cho	조준형	303. Yeng-gol Nam	님영걸
110. Hyuung-duk Jeon	전형덕	304. Hyung-min Sim	심형민
111. Jae-myeong Kim	김재명	305. Suk-hun Kang	강석헌
112. Kyung-hoon Kim	김경훈	306. Kang-surk Kim	김강석
113. Jin-ho Park	박진호	307. Jung-kyu Kim	김정규
114. Dae-an Kim	김대안	308. Kyung-yong Yoon	윤경용
115. Jae-sung Kim	김재성	309. Tae-jae Kim	김태재
116. Jeong-hwan Lee	이정환	310. Dong-wook Kim	김동욱
117. Jae-min Lee	이재민	311. Keun-hi Choi	최근호
118. Jun-yeol Song	송준열	312. Tae-jong Park	박태종
119. Sung-min Choi	최성민	313. Woan-suk Suh	서완석
120. Tae-jin Jeon	전태진	314. Ji-min Yu	유지민
121. Young-il Lim	임영일	315. Da-woon Kim	김다운
122. Jae-yoon Lee	이재윤	316. Youl-eui Ko	고열의
123. Sang-yoon Lee	이상윤	317. Byung-joon Lee	이병준
124. Jong-chan Shin	신종찬	318. Byeong-woo Do	도병우
125. Jun-cheol Shin	신준철	319. Jeong-hun Kim	김정현
126. Ji-min Kim	김지민	320. Sung-chan Kim	김성찬
127. Bok-jin Lee	이복진	321. Yul-song Lee	이율송
128. Sung-geun Lee	이성근	322. Ho-sung Son	손호성
129. Young-hak Lee	이영학	323. Jun-hyuk Kim	김진혁
130. Jae-won Park	박제원	324. Jun-young Kim	김준영
131. Ji-ho Yoon	윤지호	325. Woon-pyo Hong	홍운표
132. Si-ik Ryu	유시익	326. Chul-min Kim	김철민
133. Kyeong-ho Lim	임경호	327. Dong-soo Park	박동수
134. Seung-min Roh	노성민	328. Dong-jin Kim	김동진

135. Young-il Cha	차영일	329. Sung-mo Kim	김성모
136. Young-gwang Son	손영광	330. Hyun-sang You	유현상
137. Dong-seok Yoon	윤동석	331. Dong-jun Choi	최동준
138. Ji-sang Eun	은지상	332. Dong-seon Choi	최동선
139. Hang-kyoon Kim	김행균	333. Won Huh	허 원
140. Jeong-ro Kim	김정로	334. Ki-ryang Kim	김기량
141. Man-suk Kim	김만석	335. Jin-hyuk Lee	이진혁
142. Jong-min Lee	이종민	336. Young-man Kim	김영만
143. Ki-bum Uhm	엄기범	337. Su-won Lee	이수원
144. Young-su Kim	김영수	338. Su-je Park	박수제
145. Jae-hyuck Oh	오재혁	339. In-chang Park	박인창
146. Ji-hoon Park	박지훈	340. Seung-gyu Choi	최승규
147. Ji-chang Jeon	전지창	341. Dong-sub Kim	김동섭
148. Dong-ho Kang	강동호	342. Sung-min Choi	최성민
149. Hyun-min Lee	이현민	343. Sung-woo Cho	조성우
150. Jae-hyuk Lee	이재혁	344. Sung-yup Ha	하성엽
151. Lee-seok Kang	강이석	345. In-kyu Choi	최인규
152. Jong-joon Lee	이종준	346. Jin-kyu Lee	이진규
153. Sung-jin Yoon	윤성진	347. Kyung-soo Lee	이경수
154. Yong-min Jeong	정영민	348. Ju-ho Choi	최주호
155. Kwang-min Kim	김광민	349. Sung-min Joo	주성민
156. Geum-dong Lee	이금동	350. Yoon-sik Kang	강윤식
157. Ji-hun Shin	신지훈	351. Dae-sung Yoon	윤대성
158. Jin-hak Song	송진학	352. Joon-hwee An	안준휘
159. Sung-geon Ye	예성건	353. Seung-ha Bang	방승하
160. Kwang-hyun Ahn	안광현	354. Sung-jin Han	한성진
161. Jun-hyung An	안준형	355. Hae-won Lee	이해원
162. Bo-ram Han	한보람	356. Su-kwang Chae	채수광
163. Ho-jin Hwang	황호진	357. Hae-nam Jo	조해남
164. Jeong-keun Jang	장종근	358. Il-joong Lee	이일중
165. Nam-ho Kim	김남호	359. Jeong-pyo Lee	이정표
166. Byoung-oh Ko	고병오	360. Min-che Yoon	윤민채
167. Jong-min Lee	이종민	361. In-chan Hwang	황인찬
168. Kyung-hoon Na	나경훈	362. Da-Hyung Kim	김다형
169. Jung-won Park	박정원	363. Sang-wook Yang	양상욱

170. Chang-suk Kim	김창석	364. Kyung-ho Kim	김경호
171. Jin-hee Kim	김진희	365. Hyun-jin Lee	이현진
172. Hyun-seok Lee	이현석	366. Young-ho Son	손영호
173. Bok-young Roh	노복영	367. So-chul Yoo	유소철
174. Jin-myung Yang	양진명	368. Ji-hwan Yoon	윤지환
175. Su-min Kim	김수민	369. Jin-sung Lee	이진성
176. Sung-sil Kim	김성실	370. Jun-ho Bae	배준호
177. Tae-hee Lee	이태희	371. Sang-il Jung	정상일
178. Hyung-min Lim	임형민	372. Dong-hyeon Kim	김동현
179. Sam Lim	임샘	373. Kwang-sung Lee	이광성
180. Jin-gi Park	박진기	374. Jong-in Lim	임종인
181. Jong-hwan Park	박종환	375. Ho-young Noh	노호영
182. Kyung-bin Park	박경빈	376. Won-il Ji	지원일
183. Kook-chun Seol	설국천	377. Kwang-hyun Kim	김광현
184. Dong-deuk Sin	신동득	378. Seoung-ho Choi	최승호
185. Gil-ho Song	송길호	379. Hyoung-mo Jeong	정형모
186. Sung-pyo An	안성표	380. Ji-woong Kim	김지웅
187. Jun-song Choi	최준성	381. Yong-hun Jeung	정용훈
188. Won-suk Choi	최원석	382. Gang-hee Lee	이강희
189. Chong-ouk Kim	김종욱	383. Jin-woo Lee	이진우
190. Dong-yun Kim	김동균	384. Byoung-kwan Park	박병관
191. Doo-il Kim	김두일	385. Se-ek You	유시익
192. Jae-min Park	박재민	386. Jun-sun Shim	심준섭
193. Ji-hoon Park	박지훈	387. Hyun-kyu Moon	문현규
194. Joon-kyu Park	박준규	388. Gook-il Jang	장국일

첨부

Mr. Michael O'Flaherty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나는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각 진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Atasoy, Sarkut 대 터키, 정민규 등 100인 대 대한민국 사건에서 별개의견으로 밝혔듯이 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설득력 없는 논리를 채택하였다. 나는 위원회가 정의민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사건과 이전 사건들에서 쓰여 졌던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tasoy와 Sarkut 건과 정민규 등 100인 사건의 결정에서 이미 나는 나의 입장을 개진하였고,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기술하지는 않는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Mr. Walter Kälin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나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른 진정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진정인들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제한

임을 당사국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진정사건 Nos. 1321/2004와 Nos. 1322/2004[14]와 같은 이유로 결정되었어야 했다.

나는 다수 위원들이 Atasoy, Sarkut v. Turkey[15] 사건에서 채택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발전시킨 논거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7.3항에서 다수 위원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제11항을 상기하면서,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제18조에서 도출됨"을 강조하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견지한 신념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민간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배제한 의무 군 복무제도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여 개인의 양심상 신념을 표명하도록 강제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논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수 위원이 일반논평 제22호를 언급한 것은 불충분하다: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위원회는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신념을 표명할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후자를 언급하면서(다수의견에 의해 생략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두 가지 요소, 즉 군 복무가 양심적 요구와 불일치한다는 강한 신념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서 이러한 신념을 표명하는 것에 기초함을 지적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내면의 신념 공표 강제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공표할 권리는 동 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규약 제18조가 정한 이들 두 권리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를 경시함으로써, 다수 의견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한 양심상의 결정은 그 표명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특권적 행위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신념들은 그러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수 의견에 따르면 양심상의 이유로 납세나,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념의 표명과 제한 될 수 있는 신념 표현을 구별 짓는 기준은 무엇인가?

다수 의견의 접근법은 내심의 자유는 심지어 사상, 양심, 신념, 믿음이 당국이나 여론에 의하면 저열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양심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고, 결국에는 이를 위태롭게 만든다. 만약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에 대한 내심의 확신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체 복무가 허용된다면 양심적 신념의 표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의 전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복무가 오로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만 인정되는 한, 그들은 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자신이 사상과 신념을 공표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는 침묵할 권리이지 어떠한 이유 제시 없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군 복무로부터 면제되는 것)가 아니다.[16]

---

14)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2006.11.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15) 진정사건 번호 1853/2008, 1854/2008 Cenk Atasoy, Arda sarkut v. Turkey, 2012. 3. 29. 채택된 견해에서 위원회 의원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Mr. Michael O'Flaherty, Mr. Walter Kälin의 별개의견(동의하는) 참조

16)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2006.11.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우리는 당사국이 동 규약 제18조에 따른 진정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나 다수 의견이 개진한 이유와는 다소 다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의견 중 7.3항 및 7.4항에서 다수 의견은 일련의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실제로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의 일부로 보기보다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신념을 보유할 권리의 일부로 보는 최근의 추세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17]의 동의 의견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제로 신념 표명의 한 예로 취급하는 위원회의 초기 접근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 우리는 또한 위원회가 이전 사건에서 초기의 접근 방법을 당사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판단한 바처럼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린다.[18]

우리는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별도로 몇가지 의견을 덧붙여 기술한다.

첫째, 우리는 동 위원회와 개별 위원들이 접근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고안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하나, 설득력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위원회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실제로 제3항에 따라 비례적 제한을 받는 신념 표명의 자유로 여겨지는 다른 평화적 활동들이나 규약에 의해 공유된 가치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종교적 활동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기타 종교적 활동들 역시 존중받아야 하나 상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다수 견해의 7.3항은 개개인이 자신들의 양심에 반하지 않기 위해 신념 공표를 강요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강조가 표면상 중립적인 규칙으로부터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면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일반적인 접근법, 즉 통상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종교적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의 다수 의견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외에 당사국의 징병법의 어떠한 특수한 특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종교적 의복을 특별히 색출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동 위원회의 분석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였던 Bikramjit Singh v. France[19]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징병법이 외관상 종교적 관행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심지어 그러한 상황에서도 위원회는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국에게 종교적 관행을 겨냥한 제한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어떻게 상응하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유사하게 여기에서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하더라도 그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인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

17) 진정사건 번호 1853/2008, 1854/2008, Cenk Atasoy, Arde Sarkut 대(對) Turkey, 2012. 3. 29. 채택된 견해(위원회 위원 Mr. Gerald L. Neuman, Mr. Yuji Iwasawa, Mr. Michael O'Flaherty, Mr. Walter Kaelin의 별개의견(동의하는))

18) 진정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윤여범,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2006.11.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 진정사건 번호 1593-1603/2007, 정의민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2010. 3. 2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19) 진정사건 번호 1852/2008, Bikramjit Singh v. France, 2012. 11. 2.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Mr. Fabián Salvioli 의원의 별개의견(동의)

1. 나는 김종남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진정사건 번호 1786/2008) 사건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에 동의한다. 그리고 2011. 3. 24. 역사적인 날에 채택된 진정 1642~1741/2007 결정(정민규 등 100인 대 대한민국) 및 2012. 3. 29. 채택된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진정 1853/2008, 1854/2008) 결정에서 거듭 강조되었던 의무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법을 통합 정리한 위원회의 이 사건 의견에 제시된 모든 주장들에 동의한다.

2. 본 사건인 김종남 외 기타 대(對) 대한민국 진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기 전의 위원회 토론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설명하였다.

3.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의 동의 의견에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전까지 동 위원회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으로 선언한 결정은 의무 군 복무제도 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 규약 제18조 제3항의 심사기준을 국내법에 적용하였던 위원회의 이전 견해에서 벗어나) 정민규 등 100인 대(對)사건 이후로 동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현 시대의 국제법상 양심의 자유의 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4. 정민규 등 100인 대(對) 대한민국, Atasoy, Sarkut v. Turkey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인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에서 거듭 주장된 바처럼 위원회는 지금까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의무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의 상당한 진전을 반영하여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규약 제1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5. 의무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내재하며, 따라서 의무 군 복무 제도는 신념, 종교를 실행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념, 종교를 보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6. 자유권규약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따라 국가가 더 이상 개인에게 군 복무를 강요할 수 있는 가능한 명분이나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그것은 법적으로 견고하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7. 반대로 위원회 내 소수 입장은 인권에 대한 보다 나은 보장과 규약의 대상과 목적의 더 나은 실현을 담보한다고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소수 의견의 지지를 받는 이전의 해석을 계속해서 적용한다면, 국가는 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개인에게 그 의지에 반하여 무기 사용, 무력충돌 관여, 죽음과 심지어 타인을 살해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강요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8. 이 두 해석 중 어느 것이 동 규약의 목표와 목적을 더 충실히 실현하겠는가? 어떤 해석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효과적인 적용에 더 기여하는가? 어느 것이 개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겠는가? 대답은 명백하며, 위원회는 사건을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9. 위원회는 이전의 견해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권의 더 나은 국제적 보장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퇴보가 될 것이다.

10. 위원회는 규약 제18조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할 때 국가들은 이 점을 주의하고 조약상의 책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11. 당사국들은 그들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 군 복무제도는 과거의 일이 되고 결코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던 억압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위원회는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거나, 개인진정 사건을 처리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러한 진보적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United Nations CCPR/C/106/D/1786/2008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1 February 2013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1786/2008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06th session (15 October to 2 November 2012)

Submitted by:	Jong-nam Kim et al. (represented by counsels, André Carbonneau and Hana Lee)
Alleged victims:	The authors
State party: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communication:	15 January, 16 January and 25 April 2008 (initial submissions)
Document references:	Special Rapporteur's rule 97 decision, transmitted to the State party on 29 April 2008 (not issued in a document form).
Date of adoption of Views:	25 October 2012
Subject matter: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Substantive issu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Procedural issu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Article of the Covenant:	18, paragraph 1
Article of the Optional Protocol:	5, paragraph 2 (b)

GE.13-40755

Please recycle

CCPR/C/106/D/1786/2008

Annex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06th session)

Concerning

Communication No. 1786/2008*

Submitted by:	Jong-nam Kim et al. (represented by counsels, André Carbonneau and Hana Lee)
Alleged victims:	The authors
State party: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communication:	15 January, 16 January and 25 April 2008 (initial submissions)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eeting on 25 October 2012,

Having concluded its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No. 1786/2008,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behalf of Jong-nam Kim et al.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ving taken into account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State party,

Adopts the following: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1.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 are 388 persons,[1] all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

*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communication: Mr. Yadh Ben Achour, Mr. Lazhari Bouzid, Ms. Christine Chanet, Mr. Ahmad Amin Fathalla, Mr. Cornelis Flinterman, Mr. Yuji Iwasawa, Mr. Walter Kälin, Ms. Zonke Zanele Majodina, Ms. Iulia Antoanella Motoc, Mr. Gerald L. Neuman, Mr. Michael O'Flaherty,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el Rodley, Mr. Fabián Omar Salvioli, Mr. Marat Sarsembayev, Mr. Krister Thelin and Ms. Margo Waterval.
An individual (concurring) opinion signed by Committee member Mr. Michael O'Flaherty is appended to the present views.
An individual (concurring) opinion signed by Committee member Mr. Walter Kälin is appended to the present Views.
An individual (concurring) opinion signed by Committee members Mr. Gerald Neuman and Mr. Yuji Iwasawa is appended to the present Views.
An individual (concurring) opinion signed by Committee member Mr. Fabián Omar Salvioli is appended to the present Views.

18,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on 10 April 1990. The authors are represented by counsels André Carbonnier and Hana Lee.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authors

2.1 All 388 authors are Jehovah's Witnesses who have been sentenced to 18 months of imprisonment each for refusing to perfor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due to their religious beliefs.[2] Sixteen authors appealed their first-instance sentences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refused to recognize their rights as conscientious objectors. The authors note that Supreme Court of Korea, on 15 July 200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26 August 2004, decide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serve in the army or face prison terms. In a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the grounds of incompatibility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as proclaim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stated, inter alia, that:

> "the freedom of conscience, as expressed i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grant an individual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Freedom of conscience is merely a right to make a request to the State to consider and protect, if possible, an individual's conscience, and therefore is not a right that allows for the refusal of one's military service duties for reasons of conscience, nor does it allow one to demand an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to replace the performance of a legal duty. [...]."

2.2 The authors claim that since the highest courts of Korea had already rendered a final decision on the issue, any further appeal would be ineffective.

2.3 The authors state that since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and Constitutional courts, some 600 to 7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sentenced and imprisoned for refusing to bear arms. Others are convicted and imprisoned each month.

The complaint

3. The authors claim that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the State party amounts to a violation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They refer to the Committee's Views in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on 3 November 2006, in which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State party had breached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on the basis of identical facts as those in the present communication, and the State party was requested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merits

4.1 By note verbale of 14 November 2008, and with reference to the Committee's Views of 3 November 2006 in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party requests the Committee to reconsider its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Concretely, regarding the Committee's observation in its previous Views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which have retain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introduced alternatives to compulsory

[1] The list of authors is annexed to the present Views.

[2] All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d received their draft notice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between September 2004 and May 2007. All the authors were sentenced, between February 2006 and February 2008, to 18 months' imprisonment.

military service," the State party points out that the legal systems of Germany and Taiwan, countries which have introduced alternative service, are quite different from its own. The State party also notes that Taiwan has not been at war, while the Korean War was fought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lasted for three years and one month from 1950 to 1953, when a cease-fire agreement was finally signed. The war left one million dead from the south, and more than 10 million Koreans we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cease-fire agreement is still effective in the State party, which distinguishes it from other countries. The agreement has not yet been superseded by a new legal framework, such as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or a peace agreement to ensure non-aggression and peace, despite continued efforts to this end. In the State party's view, the security environment is not comparable to that of either Germany or Taiwan, as it shares a border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ich spans 155 miles.

4.2 As to the Committee's conten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failed to show what special disadvantage would be involved for it if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 18 were fully respected,"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is close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which is the very prerequisite for national survival and the liberty of the people. It fears that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4.3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there have always been those who are intent on evading conscription due to the relatively challenging conditions often required in the military, or concerned over the effect such an interruption will have on one's academic or professional career. Thus, it is even more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of no-exception to military service so as to ensure sufficient ground forces. The State party adds that if it were to accept claims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n the absence of public consensus on the matter, it would be impeded from securing sufficient military manpower required for national security by weakening the public's trust in the fairness of the system, leading the public to question its necessity and legitimacy. Thus, for the State party,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s should be preceded by a series of measures: stable and sufficient provisions of military manpower; equality between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as well as those with no religion; in-depth studies on clear and specific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n exemption and consensus on the issue among the general public.

4.4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at "respect on the part of the State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manifestations thereof is itself an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cohesive and stable pluralism in society," the State party is of the view that as a unique security environment prevails, fair and faithful implementa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is a determining factor to secure social cohesion. Respect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its manifestations cannot be enfor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alone. It is sustainable only if general agreement on the issue is achieved.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in July 2005 and in September 2006 showed that 72.3 per cent and 60.5 per cent,, respective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recognition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4.5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set up an alternative service in practice, guaranteeing equality and fairness between those performing military and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The majority of the soldiers in the State party perform their duties under difficult conditions and some are involved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They face the risk of jeopardizing their lives while performing their duty of defending the country. Indeed, six people died and 19 were wounded in the clash between South and North naval vessels in the Yellow Sea in June 2002. Th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nsure equality of burden with those fulfilling military service and those performing an alternative one.

4.6 The State party regrets that upon its accession to the Covenant on 10 April 1990, the Committee had not provided a clear position on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fell within the ambit of article 18. It was only on 30 July 1993, in its general comment No. 22 that the Committee announced its position that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d a breach of this provision. The State party points out that both its Supreme and Constitutional Courts had ruled that the failure to introduce a system at the present time cannot be interpreted as a breach of the Covenant, and that the requisit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punishes conscientious objectors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4.7 The State party adds that from April 2006 to April 2007, the Ministry of Defence had set up a "Joint Committe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research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Committee conducte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cluding prospects for the future demand and supply of military personnel, the statements of those who refused military service,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is field and relevant cases of foreign countries.[3]

4.8 In addition, in September 2007, the authorities announced a plan to introduce a system assigning social services to those who refuse conscription due to their religious beliefs, once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issue. The State party indicated that once such consensus is reach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public opinion and position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it would consider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conclusion, it requests the Committee to reconsider its previous view on this matter, in the light of the arguments presented.

Authors' comments

5.1 In their comments dated 23 February 2009, the authors note that their claims are identical to those in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submitted by Yoon Yeo-bum and Choi Myung-jin,[4] in which the Committee found a violation of article 18 of the Covenant. The authors deplore the State party's failure to implement its national action pla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5.2 With respect to the State party's argument on the necessity to preserve national security, the authors note that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Netherlands, Norway, Denmark or Russia had all adopted laws recognizing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war time. There is no evidence that those laws weakened the States' national security. Another example is the State of Israel, which, since 1948, has been involved in military confrontations that have resulted in a much higher number of casualties than those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over the last 50 years. The State of Israel, nevertheless, exempts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military service. The authors conclude that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does not compromise a country's national security.

5.3 The authors further contend that the current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State party amounts to two per cent of those enlisted for military service each year; this number is not high enough to have any type of influence on the ability of the State party to defend itself. They further note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do not serve the army, but spend time in prison, which, in their view, suggests that the State party's refusal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o allow alternative service has not contributed to

[3] The State party has not provided any ind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4]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improving or maintaining its national security. As for the State party's fear that recogniz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would lead to an increase in requests from Buddhists, Catholics, and others from the Christian faith, the authors contend that there is no record in any country which has introduced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of a substantial increase in requests for exemption from the ranks of Buddhists, Catholics and others from the Christian faith.

5.4 With regard to State party's argument of the alleged necessity to preserve social cohesion, the authors reply by quoting a United States of America Supreme Court ruling of 1943, in which it was considered that fundamental freedoms do not depend on the outcome of elections.[5] The authors argue that public opinion cannot excuse a breach of the Covenant, or of the State party's own Constitution.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protects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s of conscience and religion. Thus, domestic law, which includes the Covenant, protects such rights and therefore protects the authors'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uthors, further contend that reliance on public polls can be misleading; on 18 September 2007, when the Ministry of Defence announced that it had decided to introduc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t made reference to a poll showing that 50.2 per cent of the population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The authors quote two other polls showing a similar trend.

5.5 As for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when it acceded to the Covenant, the Committee had not yet issued its general comment No. 22 broadening the scope of article 18 to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uthors point out that subsequent to the State party's accession to the Covenant, it became a member of the then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adopted resolutions on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1993, 1995, 1998, 2000, 2002 and 2004. The State party did not object to any of them.

5.6 On 16 January 2012, the authors inform the Committee that in two judgements of 30 August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e following:

> "[...] no article in the Covenant, including article 18, explicitly mentions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ittee [...] is merely a recommendation to its States parties, but is not legally binding [...]. Therefore, the Covenant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nor does it exercise legally binding effect upon conscientious objection."[6]

Issues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6.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s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Human Rights Committee mu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 of its rules of procedure, decide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

[5]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et al.* v. *Barnette et al*, 319 U.S. 624, 639 (1943).

[6]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se *2008 Hun Ga 22, 2009 Hun Ga 24, 2010 Hun Ga 16, 2009 Hun Ga 7, 2010 Hun Ga 37, 2008 Hun Ba 103, 2009 Hun Ba 3* of 30 August 2011, para. 3.3.2.1.;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se 2007 Hun Ga 12, 2009 Hun Ba 103* (consolidated) of 30 August 2011, para. 3.4.2.1.

6.2 The Committee notes, as required by article 5, paragraph 2 (a)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procedure of investigation or settlement.

6.3 The Committee notes that, apart from the 16 authors mentioned in para. 2.1 above, the majority of the authors have not appealed the judgements of the respective District Courts on the basis that any appeal would have been ineffective.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ontention that both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15 July 200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26 August 2004, as well as most recently on 30 August 2011, decide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serve in the army or face prison terms; and since the highest jurisdictions had made a final decision on the issue, any further appeal would be futile. Taking into account the authors' arguments, and in absence of any objection by the State party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is not preclud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5, paragraph 2 (b), of the Optional Protocol, from examining the present communication.

6.4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have sufficiently substantiated their claims, for purposes of admissibility; it declares the communication admissible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and proceeds to its consideration of the merits.

Consideration of the merits

7.1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present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7.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due to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as a result, they were prosecuted and imprisoned. The Committee notes that in the present case, the State party reiterates the arguments advanced in response to similar earlier communications[7] before the Committee, notably on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equality between military and alternative service and lack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has already examined these arguments in its earlier Views,[8] and finds no reason to depart from its earlier position.

7.3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22 (1993), in which it considers that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freedoms enshrined in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time of public emergency, as stated i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Covenant. Although the Covenant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Committee reaffirms its view that such a right derives from article 18, inasmuch as the obligation to be involved in the use of lethal force may seriousl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9]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embraces the right not to declare, as well as the right to declare, one's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ithout possibility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implies that a person may be put in a position in which he or she is deprived of the right to choose whether or not to declare his or 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by being under a legal

[7]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593-1603/2007,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3 March 2010.

[8] Ibid.

[9] See for example, communications Nos. 1642-1741/2007,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4 March 2011.

obligation, either to break the law or to act against those beliefs within a context in which it may be necessary to deprive another human being of life.

7.4 The Committee therefore reiterates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inherent to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t entitles any individual to exemption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the latter cannot be reconciled with the individual's religion or beliefs. The right must not be impaired by coercion. A State party may, if it wishes, compel the objector to undertake a civili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outside of the military sphere and not under military command. The alternative service must not be of a punitive nature, but must rather be a real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compatible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10]

7.5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derives from their religious beliefs which, it is uncontested, were genuinely held, and that the authors' subsequent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n infringement of their freedom of conscience, in breach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Repression of the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xercised against persons whose conscience or religion prohibit the use of arms, is incompatible with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11]

8.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cludes that the facts before it reveal, in respect of each author,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expunging their criminal records and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compensat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which includes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guarantee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10. Bearing in mind that by becoming a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the State party has recognized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venant or not and tha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undertaken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y in case a viol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Committee wishes to receive from the State party, within 180 days,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Committee's present Views. The State party is also requested to publish the Committee's Views.

[Adopt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10] See for example, communications Nos. 1853 and 1854/2008, *Atasoy and Sarkut* v. *Turkey*,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9 March 2012, para. 10.4.

[11] See for example, communications Nos. 1642-1741/2007,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on 24 March 2011.

Appendix 1

1. Jong-nam Kim	195. Dae-ho Shin
2. Hyun-suk Kang	196. Jae-gul Yoon
3. Ue-dong Jeong	197. Hyo-jae Choi
4. Hyun-ju Shin	198. Tae-ho Eom
5. Jun-tae Park	199.Tae-hyun Hwang
6. Seung-tae Kim	200. Sung-young Kim
7. Joon-ho Seok	201. Jae-min Seol
8. Hee-won Choi	202. Sang-yeon Won
9. Yang-ho Jung	203. Chung-won Jeong
10. Jung-hoon Kwon	204. Don-bum Joh
11. Su-min Park	205. Chang-hwan Kim
12. Jun-won Seok	206. Su-won Lee
13. Seul-gi Hong	207. Young-bin Oh
14. Bong-june Kim	208. Jin-bum Park
15. Hyung-chan Kim	209. Dong-hwan Kim
16. Hyun-je Kim	210. Sol Kim
17. Yeo-ma-ye Na	211. Byeong-joo Ko
18. Jae-il Hong	212. Jung-ho Lee
19. Hyung-won Kang	213. Byung-hyun Oh
20. Kyung-hee Jo	214. Sung-ryong Oh
21. Da-woon Jung	215. Ki-soo Song
22. Tae-song Kim	216. Sung-hyun Yoon
23. Kyu-dong Park	217. Sung-wan Go
24. Geon-uk Kim	218. Se-hee Han
25. Sul-ki Kwon	219. Joon-tae Hwang
26. Gyeong-su Park	220. Deuk-soo Kim
27. Chan-ho Eom	221. Hyo-sung Kim
28. Bit Han	222. Jae-won Kim
29. Soon-hyun Hwang	223. Pil-young Kim
30. Jae-ha Lee	224. Tae-won Kim
31. Hyung-ju Kang	225. Sung-hun Ko
32. Jun-seok Oh	226. Jeong-tae Lee
33. Jung-hyun Seo	227. Su-hyeon Park

34. Jae-chul Chung	228. Hye-gang Seo
35. Sung-il Jang	229. Sung-yub Jung
36. Ki-yong Kim	230. Dae-hyun Kang
37. Dong-il Song	231. Ja-won Kim
38. Hyun-sung Ha	232. Jung-woo Kim
39. Sung-min Chung	233. Kyung-min Kim
40. Min-jae Kim	234. Hae-joon Kwon
41. Byong-oh Ko	235. Sang-suk Lee
42. Sun-il Kwon	236. Ji-yun Park
43. Young-nam Choi	237. Young-jae Park
44. Ji-won Min	238. Young-wook Park
45. Yeo-reum Yoon	239. Dong-in Seon
46. In-hee Kim	240. Ji-min Ham
47. Jeong-hun Ko	241. Yoon-suk Kim
48. Tae-ik Kwan	242. Kwang-eun Lee
49. Jin-woong Kim	243. Hee-min Park
50. Ki-bok Sung	244. Neong-kul Park
51. Sang-il Ma[12]	245. Seong-il Park
52. Kyong-nam Choi[13]	246. Sung-yoon Park
53. Seul-gi Lee[13]	247. Jun-sub Shim
54. Jin-taek Choi[13]	248. O-nam Song
55. Yun-taek Hong[13]	249. Hyun-woo Choi
56. Eun-sang Lee[13]	250. Il-jung Jo
57. Young-il Jang[13]	251. Jeong-duk Kim
58. Chang-yang Jung	252. Seung-woo You
59. Jin-geun Kim	253. Tae-jong Yu
60. Seon-kyum Kim	254. Hyun Baek
61. Min-kyu Park	255. Cheong-won Bang
62. Do-in Jun	256. Sung-kook Jo
63. Kyu-myung Jung	257. Hong-won Kim
64. Min-spp Kang	258. Sang-goo Lee

[12] Messrs. Sang-gil Ma, Kyong-nam Choi, Seul-gi Lee, Jin-taek Choi, Yun-taek Hong, Eun-sang Lee, Young-il Jang, Won-il Ji, Kwang-hyun Kim, Seoung-ho Choi, Hyoung-mo Jeong, Ji-woong Kim, Yong-hun Jeung, Gang-hee Lee, Jin-woo Lee and Byoung-kwan Park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Their appeals were rejected by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65. Yeong-chang Yu
66. Sung.hyun Son
67. Suk-dong Kim
68. Doc-ho Her
69. Yang-hyun Ko
70. Jung-woo Hong
71. Kyoung-soeb Lee
72. Min-kyu Lee
73. Jun-cheol Yoon
74. Jong-min Jang
75. In-goon Kim
76. Myeong-seob Kim
77. Sung-ho Kim
78. Yong Kim
79. Young-joon Kwon
80. Hee-sung Lee
81. Joo-min Park
82. Jung-joo Park
83. Hyun-dong Yang
84. See-won Kim
85. Oh-hyun Kwon
86. Jue-hune Park
87. Deok-min Ahn
88. Chung-jeol Lee
89. Ho-young Lee
90. Jun-young Lee
91. Chul-seung Yang
92. Jin-hwang Kim
93. Hyun-woo Lee
94. Ki-taek Lee
95. Hak-in Oh
96. Barl-keun Lee
97. Ju-hak Lee
98. Song-taek Jeong
99. Ji-won Park
259. Sung-won Lee
260. Mun-gye Min
261. Han-gyol Soun
262. Jun Yu
263. Kyeong-tae Kang
264. Han-gil Lee
265. Kyoung-jun Lee
266. Heung-soo Reu
267. Gyo-sik Bae
268. Seung-sik Bae
269. She-Young Kim
270. Seung-gwan Back
271. Ki-hoon Choi
272.Chang-hoon Jeon
273. Seung-hwan Kim
274. Dong-yoon Lee
275. Sung-min Park
276. Jun-ho Son
277. Seong-ki Jung
278. Yong-hwa Kim
279. Gang-geon Lee
280. Jung-geun Yoo
281. In-jae Han
282. Ha-rim Min
283. Chan-hyuk Joun
284. Seok-min Lee
285. Joon-young Ahn
286.Young-jae Kim
287. Sun-Pil Hwang
288. Doo-sup Kim
289. Hyun-sub Kim
290. Jae-jun Kim
291. Seung-hyun Jung
292. Chung-yeol Choi
293. Jae-hee Kim

100. Sung-hyun Choi	294. Dong-hwan Ko
101. Sa-em Park	295. David Shin
102. Jin-gon Kim	296. Sang-hyun You
103. Kwang-nam Kim	297. Dong-geun Kim
104. Tae-hoon Uhm	298. Cheon-ha-tongil Jeon
105. Young-hoon Jang	299. Seung-jin Jeon
106. Woo-jin Jung	300. Hyun-il Jin
107. Myung-jin Kim	301. Chong-jul Kim
108. Sung-gyu Kim	302. Myoung-chul Lee
109. Jun-hyung Cho	303. Yeng-gol Nam
110. Hyuung-duk Jeon	304. Hyung-min Sim
111. Jae-myeong Kim	305. Suk-hun Kang
112. Kyung-hoon Kim	306. Kang-surk Kim
113. Jin-ho Park	307. Jung-kyu Kim
114. Dae-an Kim	308. Kyung-yong Yoon
115. Jae-sung Kim	309. Tae-jae Kim
116. Jeong-hwan Lee	310. Dong-wook Kim
117. Jae-min Lee	311. Keun-hi Choi
118. Jun-yeol Song	312. Tae-jong Park
119. Sung-min Choi	313. Woan-suk Suh
120. Tae-jin Jeon	314. Ji-min Yu
121. Young-il Lim	315. Da-woon Kim
122. Jae-yoon Lee	316. Youl-eui Ko
123. Sang-yoon Lee	317. Byung-joon Lee
124. Jong-chan Shin	318. Byeong-woo Do
125. Jun-cheol Shin	319. Jeong-hun Kim
126. Ji-min Kim	320. Sung-chan Kim
127. Bok-jin Lee	321. Yul-song Lee
128. Sung-geun Lee	322. Ho-sung Son
129. Young-hak Lee	323. Jun-hyuk Kim
130. Jae-won Park	324. Jun-young Kim
131. Ji-ho Yoon	325. Woon-pyo Hong
132. Si-ik Ryu	326. Chul-min Kim
133. Kyeong-ho Lim	327. Dong-soo Park
134. Seung-min Roh	328. Dong-jin Kim

135. Young-il Cha
136. Young-gwang Son
137. Dong-seok Yoon
138. Ji-sang Eun
139. Hang-kyoon Kim
140. Jeong-ro Kim
141. Man-suk Kim
142. Jong-min Lee
143. Ki-bum Uhm
144. Young-su Kim
145. Jae-hyuck Oh
146. Ji-hoon Park
147. Ji-chang Jeon
148. Dong-ho Kang
149. Hyun-min Lee
150. Jae-hyuk Lee
151. Lee-seok Kang
152. Jong-joon Lee
153. Sung-jin Yoon
154. Yong-min Jeong
155. Kwang-min Kim
156. Geum-dong Lee
157. Ji-hun Shin
158. Jin-hak Song
159. Sung-geon Ye
160. Kwang-hyun Ahn
161. Jun-hyung An
162. Bo-ram Han
163. Ho-jin Hwang
164. Jeong-keun Jang
165. Nam-ho Kim
166. Byoung-oh Ko
167. Jong-min Lee
168. Kyung-hoon Na
169. Jung-won Park
329. Sung-mo Kim
330. Hyun-sang You
331. Dong-jun Choi
332. Dong-seon Choi
333. Won Huh
334. Ki-ryang Kim
335. Jin-hyuk Lee
336. Young-man Kim
337. Su-won Lee
338. Su-je Park
339. In-chang Park
340. Seung-gyu Choi
341. Dong-sub Kim
342. Sung-min Choi
343. Sung-woo Cho
344. Sung-yup Ha
345. In-kyu Choi
346. Jin-kyu Lee
347. Kyung-soo Lee
348. Ju-ho Choi
349. Sung-min Joo
350. Yoon-sik Kang
351. Dae-sung Yoon
352. Joon-hwee An
353. Seung-ha Bang
354. Sung-jin Han
355. Hae-won Lee
356. Su-kwang Chae
357. Hae-nam Jo
358. Il-joong Lee
359. Jeong-pyo Lee
360. Min-che Yoon
361. In-chan Hwang
362. Da-Hyung Kim
363. Sang-wook Yang

170. Chang-suk Kim	364. Kyung-ho Kim
171. Jin-hee Kim	365. Hyun-jin Lee
172. Hyun-seok Lee	366. Young-ho Son
173. Bok-young Roh	367. So-chul Yoo
174. Jin-myung Yang	368. Ji-hwan Yoon
175. Su-min Kim	369. Jin-sung Lee
176. Sung-sil Kim	370. Jun-ho Bae
177. Tae-hee Lee	371. Sang-il Jung
178. Hyung-min Lim	372. Dong-hyeon Kim
179. Sam Lim	373. Kwang-sung Lee
180. Jin-gi Park	374. Jong-in Lim
181. Jong-hwan Park	375. Ho-young Noh
182. Kyung-bin Park	376. Won-il Ji[13]
183. Kook-chun Seol	377. Kwang-hyun Kim[13]
184. Dong-deuk Sin	378. Seoung-ho Choi[13]
185. Gil-ho Song	379. Hyoung-mo Jeong[13]
186. Sung-pyo An	380. Ji-woong Kim[13]
187. Jun-song Choi	381. Yong-hun Jeung[13]
188. Won-suk Choi	382. Gang-hee Lee[13]
189. Chong-ouk Kim	383. Jin-woo Lee[13]
190. Dong-yun Kim	384. Byoung-kwan Park[13]
191. Doo-il Kim	385. Se-ek You
192. Jae-min Park	386. Jun-sun Shim
193. Ji-hoon Park	387. Hyun-kyu Moon
194. Joon-kyu Park	388. Gook-il Jang

Appendix II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Mr. Michael O'Flaherty (concurring)

I concur with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in finding that the facts before the Committee reveal, in respect of each author,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However, as I observed in separate opinions in the cases of *Atasoy and Sarkut* v. *Turkey* and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adopted reasoning that is unconvincing. I consider that the Committee should use the approach that is employed in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and earlier cases. I have set out my position, which remains unchanged and will not be repeated here, in my opinions in the *Atasoy and Sarkut* and the *Jeong et al.* cases.

(*Signed*) Michael O'Flaherty

[Don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ppendix III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Mr. Walter Kälin (concurring)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mmittee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 18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not sufficiently shown that punishing the authors for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reasons and not providing them with the opportunity of an alternative service is a limitation of their right to manifest their belief as protected by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that is justified and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said provision. Therefore, the case should have been decided on the same basis as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1]

I continue to have serious doubts as to the reasoning the majority adopted in *Atasoy and Sarkut* v. *Turkey*,[2] and further developed in this case. In paragraph 7.3, the majority recalls paragraph 11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2 (1993) by highlighting that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derived "from article 18, inasmuch as the obligation to be involved in the use of lethal force may seriousl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noting "that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embraces the right not to declare, as well as the right to declare, one's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It concludes that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ithout possibility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forces a person to declare his or 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in violation of that freedom.

This reasoning is problematic in several regards. The majority's reference to general comment No. 22 is incomplete as there, the Committee accepted that "the obligation to use lethal force ma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right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 (emphasis added). With the latter reference (deleted by the majority) the Committee indicat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based on two elements: strong conviction that performing military service is incompatible with the demands of conscience and the manifestation of this conviction by actually refusing to join the armed forces. While it is true that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bsolutely prohibits forcing anyone to divulge his or her inner convictions, the right to manifest such conviction in words or deeds may be limited under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Covenant. By disregarding the fundamental distinction made by article 18 between these two rights, the majority seems to assume that certain conscientious decisions, including the one not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re privileged insofar as their manifestation deserves the absolut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approach implies that other convictions may not be worthy of such protection. Would the majority provide absolute protection to persons conscientiously refusing to pay taxes or to provide their children with any kind of education? If no, what are the criteria to distinguish between manifestations of conviction worthy of absolute protection and those expressions of one's beliefs that may be limited?

[1]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2] See communications Nos. 1853 and 1854/2008, *Atasoy and Sarkut* v. *Turkey*, Views adopted on 29 March 2012,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Mr. Gerald L. Neuman, jointly with Mr. Yuji Iwasawa, Mr. Michael O'Flaherty and Mr. Walter Kälin (concurring).

The majority's approach dilutes and, in the long run, risks jeopardizing the very core meaning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namely that the *forum internum* must be protected absolutely, even in the case of thoughts, conscientious convictions and beliefs considered offensive or illegitimate by authorities or public opinion. Freedom at its most basic level would be undermined if we would allow the State to assess what we think, feel and belief, even where we do not manifest these inner convictions.

Final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ajority's assumption that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would not force a person to declare his or 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Indeed, as long as such service would only be open to conscientious objectors, they would be required to explain why they are not in a position to perform military service. The absolute right not to be compelled to reveal one's thoughts or belief i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not the right to raise claims vis-à-vis the State (here,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without giving any reasons.[3]

(*Signed*) Walter Kälin

[Don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3]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Appendix IV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s Mr. Gerald L. Neuman and Mr. Yuji Iwasawa (concurring)

We concur on the Committee's conclusion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 18 of the Covenant, but for somewhat different reasons than those given by the majority. In paragraphs 7.3 and 7.4 of its Views, the majority continues the recent trend in its jurisprudence that consider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part of the absolutely protected right to hold a belief, rather than as part of the right to manifest a belief in practice, which is subject to limitation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18. For the reasons expressed in a concurring opinion in *Atasoy and Sarkut* v. *Turkey*,[1] we continue to adhere to the Committee's earlier approach, which treated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nstance of manifestation of belief in practice. We also conclud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provided a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denying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s the Committee had found in prior cases applying its earlier approach to the situation in this State party.[2]

We write separately on the present occasion to add a few further observations.

First, while we appreciate the efforts of the Committee and of individual members to elaborate reasons for the change of approach, we do not find them convincing. We do not see how they would successfully distinguish the activity the Committee considers "absolutely protected" from other pacifist activities that the Committee would regard as manifestations of belief in practice subject to proportionate limitation under paragraph 3, or from other religious activities that the Committee might regard as expressing values shared by the Covenant. These other religious practices are also entitled to respect, and yet remain subject to restriction when circumstances so necessitate.

Second, paragraph 7.3 of the present Views places some emphasis on the fact that individuals may be forced to declare their beliefs in order to avoid violating their consciences. We do not see how that emphasis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 approach of the Committee to religious exemptions from facially neutral rules, which ordinarily requires claimants to assert their religious scruples in order to bring themselves within an exemption.

The majority's analysis in this case does not depend on any particular feature of the State party's conscription law, other than its failure to provide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ere is no argument here that the law discriminates on its face against religious practices, unlike in the case of *Singh* v. *France*,[3] where the express singling out of religiously motivated apparel for disfavored treatment provided an important element in the Committee's analysis. Even in that situation, the Committee applied paragraph 3 of article 18, and gave the State party the opportunity to explain how its targeted restriction of religious practice was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purposes it was designed to serve. We would similarly

[1] Communications Nos.1853 and 1854/2008, *Atasoy and Sarkut* v. *Turkey*, Views adopted on 29 March 2012, I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Mr. Gerald L. Neuman, jointly with members Mr. Yuji Iwasawa, Mr. Michael O'Flaherty and Mr. Walter Kaelin (concurring).

[2] Communications Nos. 1321 and 1322/2004, *Yoon and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593-1603/2007,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3 March 2010.

[3] Communication No. 1852/2008, *Singh* v. *France*,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1 November 2012.

consider the State party's arguments here, but would then conclude that it has not sufficiently justified its denial of conscientious objection.

(*Signed*) Gerald L. Neuman

(*Signed*) Yuji Iwasawa

[Don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ppendix V

Individual opinion of Committee member Mr. Fabián Salvioli (concurring)

1. I concur with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the case of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786/2008) and with all the arguments set forth in its Views, which have consolidated the fundamental case law in respec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ich was laid down following the decisions on communications 1642-1741/2007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were adopted on the historic date of 24 March 2011 and re-asserted in the decision in the case of *Atasoy and Sarkut* v. *Turkey* (communications 1853 and 1854/2008) adopted on 29 March 2012.

2. The discussion within the Committee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decision in the case at hand of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has led me to set out a number of thoughts on the matter.

3. As I indicated in my concurring opinion in the case of *Atasoy and Sarkut* v. *Turkey,* decisions have hitherto been limi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perform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ich the Committee has decla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since the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case, in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and in a departure from the Committee's previous case law, which subjected domestic legislation to the test of article 18, paragraph 3, to decide on a possible violation) have taken into account the evolu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4. Since the *Jeo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tasoy and Sarkut* v. *Turkey* cases, and as has been reasserted in this case of *Kim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has developed a case law that reflects the considerable evolution, to date,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 holds that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article 18 of the Covenant) include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5.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s inherent i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ccordingly,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s not only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ractice a belief or religion, it is also a violation of the right to hold a belief or religion.

6. It follows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the Covenant, there can no longer be any restriction or possible justification to enable a State to compel a person to perform military service. The Committee has provided ample explanation for its new approach, which is legally robust, and reflects the evolu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7. In contrast, the minority position within the Committee is unable to explain how its stance provides better guarantees for human rights, and better fulfils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Were we to continue to apply the former interpretation – which enjoys the support of the minority – a State would be able to find reasons for compelling a person, against his or her will, to use weapons; to become involved in armed conflict; to run the risk of dying and, what is even worse, of killing, without such act(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Covenant.

8. Which of these two interpretations better fulfils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Which interpretation better contributes to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of them better guarantees the rights of individuals? The answer is indisputable, and the Committee should ask these questions of itself each time it decides on a case.

9. The Committee should not revert to its previous case law; were it to do so, it would be a serious retrograde step that would be unacceptable from the angle of better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human rights.

10. The Committee has set out its position on the content of article 18 of the Covenant; States should take due note of this and honour the commitments they entered into when they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1. States parties should adopt legislation to amend their domestic law in such a way that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comes a thing of the past and an example of a form of oppression that should never have existed. Until this comes to pass, when examining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and in its case law on individual cases, the Committee should maintain its progressive approach towards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igned*) Fabián Omar Salvioli

[Don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Span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7월 2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피고인)	죄명	환부대상자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원)
2013형제9670호	2013압제340호	김영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명불상자들	15호	팬티(여성용)	1장
					16호	가방(검정색)	1개

---

1. 다음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7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3형제9550호	2013압제208호	신은광외3명	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해자불상	2	LED TV	1개
2013형제9550호	2013압제208호	신은광외3명	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해자불상	3	리모콘	1개